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이승호** · 홍민기***

요약

이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 상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가구 소득 및 지출 변화를 2019년 같은 시기의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 소득과 지출이 각각 4.4%, 8.1% 감소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소득이 11.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가구 소득과 지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이후의 거리두기 완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경제의 충격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감염병 확산 시기의 소득 감소는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많이 속한 2분위 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지출 감소는 고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지출이 고르게 증가하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의 70~80%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소득 감소 보전과 소비 활성화 모두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재난지원금의 용도와 기간을 한정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설계 시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주요어: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소득, 가구 지출, 한계소비성향

* 이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0년 12월에 발간한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변화』 보고서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한 원고이며, 일부 분석 결과가 「노동리뷰」 2020년 12월호에 수록되었습니다.

** 주저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eesh99@kli.re.kr)

*** 공동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minki@kli.re.kr)

1. 서론

조금 참으면 지나갈 것 같았던 감염병 위기가 2020년을 거쳐 2021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일상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고, 우리 사회는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 요인들이 역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제 활동 역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일거리가 사라져 무급휴직에 내몰린 근로자, 영업을 제한된 업종의 자영업자는 당장의 생계유지를 걱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대면하거나 집단적으로 향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서는 지출을 큰 폭으로 줄였고,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도 지출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 연구는 2020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정부 대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 활동 변화를 분석한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세계적인 방역위기로 이어졌고, 일부 선진국에서도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특정 지역을 봉쇄조치(lockdown)하는 등의 사례가 관측되었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로 경제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다행히 한국 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방역체계를 갖추었다.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격리한 후 감염병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로 추가 확산을 예방하였다. 정부는 긴급하게 기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보조금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위기에 대처하였다. 고용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취약집단에게 임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가구와 기업의 체감 경기는 과거 경험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상으로 급격히 얼어붙었고,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지속될수록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동소득의 감소에 비해 지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된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개별 가구도 사적이전이나 저축 등을 활용해서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서는 개별 가구에서 소득보다 지출의 변화가 더 크게 관측된다.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가 관측되는 점은 비슷하지만,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가구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두기 의무화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지출이 줄어든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방역 수준을 높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가구 지출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노동소득이 감소한 가구에서 가구 지출이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따라서 방역위기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과 함께 지출 변화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영향의 정도는 하위집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소득감소 완화와 소비지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추이에 따라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 내에서도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 추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확산 초기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취약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했지만, 2020년 5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성격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하반기부터는 다시 소상공인이나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편적인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이 연구는 2020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정부 대응에 따른 가구 경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완화 과정과 정부 대응에 따라 2020년 상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가구 소득, 지출 변화를 2019년의 변화와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 공적이전소득 변화 대비 소비지출 변화를 통해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며, 전체 가구 대상 분석 외에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를 같이 제시한다.

감염병 확산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2020년의 위기 상황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던 이전의 감염병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 감소에 비해 지출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제위기보다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는 분석은 향후의 중장기적 대응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존 연구

감염병의 확산은 다양한 경로로 가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효과는 크게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영향,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한 영향,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영향 경로의 특성과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첫째, 감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단계적 방역조치는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일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방역 활동을 확대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외식과 모임, 여가, 문화활동, 여행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외부활

동들이 우선적으로 감소한다. 줄어든 소비지출의 일부는 다른 대체 소비로 채워진다. 예컨대, 외식이 줄어든 만큼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 위해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지출이 늘어나는 식이다. 여행과 같이 적절한 대체활동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 자체가 감소한다. 초기 방역 조치로 확산 추이가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화하고, 나아가서는 특정 업종의 영업 제한이나, 위험 지역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감염 위험이 높고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경할수록,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구의 경제활동도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단, 방역조치로 인한 지출 변화는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는 비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줄이는 변화가 관측되기 쉽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이전에도 필수적인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지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소비에 익숙한 청년 집단에 비해서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지출 재편이 관측되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구 경제의 변화는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2020년 4월 이후 소비지출이 전월 대비 13.6% 줄어들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BEA, 2020).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소비지출이 이전 대비 27% 가량 감소했으며,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 우한 지역에서는 소비지출 감소 정도가 70%로 가장 높았다(Chen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 확산 전후 프랑스의 카드 지출 변화를 분석한 Bounie et al.(2020)의 연구에 의하면, 오프라인 지출 감소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관련 산업이 발달한 한국의 경우 온라인을 활용한 소비 대체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은 다수의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김미루, 오윤해, 2020; 남재현, 이래혁, 2021;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1, 이원진, 여유진, 2021 등).

둘째, 감염병의 확산은 불안정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줄이고, 대면 빈도가 높은 산업의 자영업자 매출을 줄이는 경로를 통해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해당 가구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로 인해 관련 산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등의 고용충격이 관측된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제조업 등 기타 산업도 타격을 받는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정규 노동시간 이외의 초과 노동이 줄어들고, 교대제가 시행되는 등의 변화가 관측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들은 모두 해당 가구에 있어서 주요 소득원의 상실 또는 감소를 의미한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이동제한 조치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용충격이 관측되었다. 오삼일, 이상아(2020)에 의하면, 비필수,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의 42~74% 수준이며, 단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자리 비중도 35%에 달한다. 이 일자리에는 저학력의 여성, 고령자 및 청년 등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선,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지출 감소가 고용 불안정 집단에서만 관측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 가설에 의하면, 개인이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일정한 지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Malley and Moutos, 1996; 이현주 외, 2016).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수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출을 줄이는 가구가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여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및 폐업을 막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소비지출이 급감하여 실물경제가 부진에 빠지면, 그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개별 가구의 노동소득이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물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갑작스럽게 소득이 크게 감소한 가구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적이전제도는 가구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최소한의 소비지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작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갖춘 가구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위기가구의 소득 감소를 지원하고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ILO, 2020).

그러나 지급된 공적이전 중에서 어느 정도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소비확대가 되레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Chetty et al., 2020; Kim et al., 2020). 또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동성이 적은 저소득층에서 소비 증가가 더 즉각적으로 관측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Baker et al., 2020).

이상의 세 가지 효과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차가 짧고 복수

의 효과들이 동시에 관측되기 때문에 개별 효과를 구분해서 추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코로나 19의 확산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관측된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해 가구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감염병의 확산 추이가 안정화되고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초기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및 보조금 지급의 효과 차이를 실증 분석하되, 2020년 3~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고용충격이 나타난 효과와 이후 5~6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3. 분석자료와 방법

1) 분석자료

분석에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사용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 단위 소득과 지출의 상세한 내역과 함께, 가구 구성원의 인구사회적 변수 등을 제공한다. 가계부기장방식으로 매월 조사가 이뤄져서 단기적인 경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급격한 사회 변화의 영향을 추정하려면, 가급적 조사 주기가 짧은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는 가구주의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하면서 가구의 소득과 지출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조사 주기가 가장 짧은 자료이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소득과 지출 변화를 같이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할 조건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한다.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구 소득, 지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를 같이 활용한다. 감염병 확산 이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좋지만, 분석자료의 표본,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의 변화로 인해 2019년 이전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기존 조사 범위에서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분리하였고, 표본 규모를 줄이고, 조사방식을 면접조사로 변경하였다. 2018년에는 소득부문 조사의 표본추출틀을 변경하고, 표본규모를 확대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는 농어가를 포함하는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같이 조사하고 있다(이원진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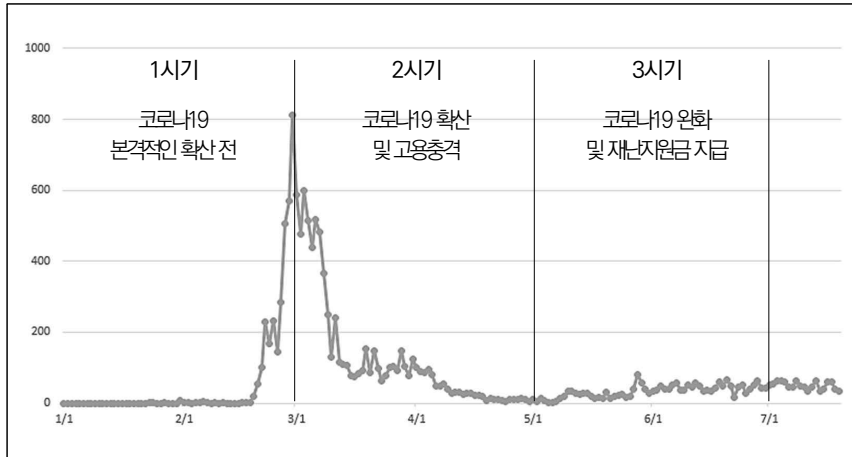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2019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새로운 시계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결과변수는 가구 소득과 지출의 총금액 및 항목별 금액이다. 집단별 특성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가구의 성, 나이, 교육 수준, 가구규모 변수를 모형에 포함한다.

2)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정책

코로나19의 확산과 정부 대응으로 인한 월별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월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정부 대응이 시작되었으나,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2월은 중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과 ‘주의’를 거쳐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었지만(그림 1 참조),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이 2월 말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일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2020년 1~2월의 고용률은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변화 추이도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2 참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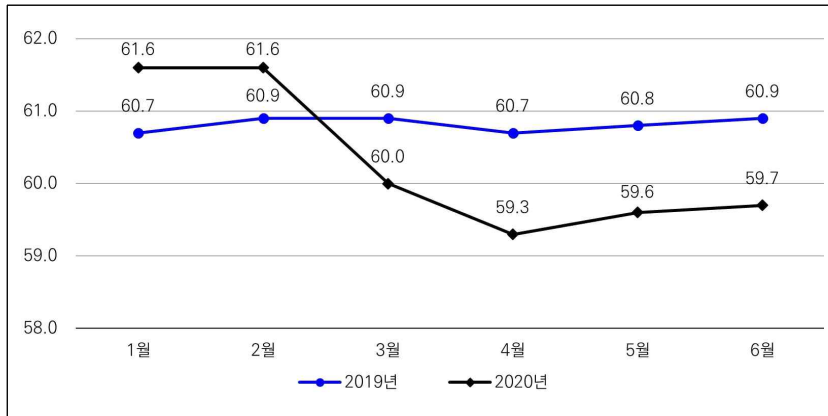
[그림 1] 2020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변화 추이



자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 단, 통계청 고용지표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를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2월 중순 이후의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영향이 고용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2] 2019~2020년의 1~6월 계절조정 고용률 변화 추이



주: 계절조정 고용률은 해당 월에 실제 관측된 고용률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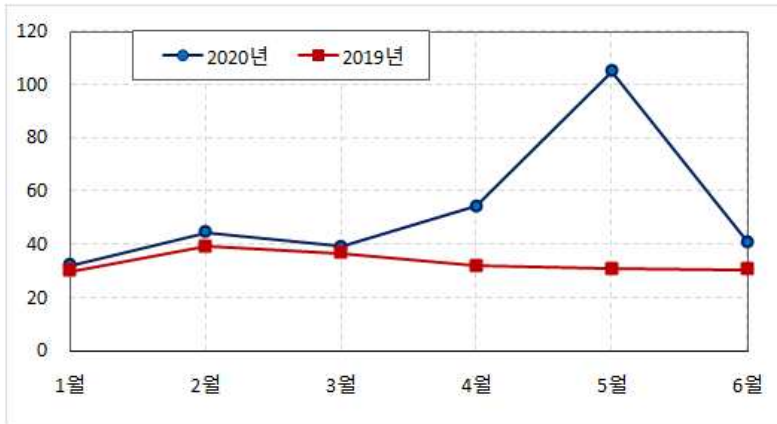
3월과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된 시기이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신학기 입학 및 개학을 수차례에 걸쳐서 연기하였고, 가족 내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었고,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대면을 요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이 중단 혹은 연기되었다. 여행과 외식 등의 산업에서는 소비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대면 서비스업 관련 자영업의 경우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관측되었고, 두 달에 걸쳐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5월과 6월은 이전에 비해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가 안정화되면서 감염병의 위험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인 적응이 시작된 시점이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위축되었던 소비활동도 기지개를 켜다. 등교가 순차적으로 시작되었고, 업종별 영업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득 감소 보전 및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고용률은 이전까지의 감소 추이를 멈추고 반등하면서 회복 추이를 보였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5월에 집중된 것은 가계동향조사의 공적이전소득 변화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2019년 상반기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월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20년 상반기에는 4월에 조금 증가하였고, 5월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4월에 아동돌봄쿠폰 등의 일부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금이 5월에 집중되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6월에는 공적이전소득 금액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3] 2019-2020년 공적이전소득의 월별 변화 추이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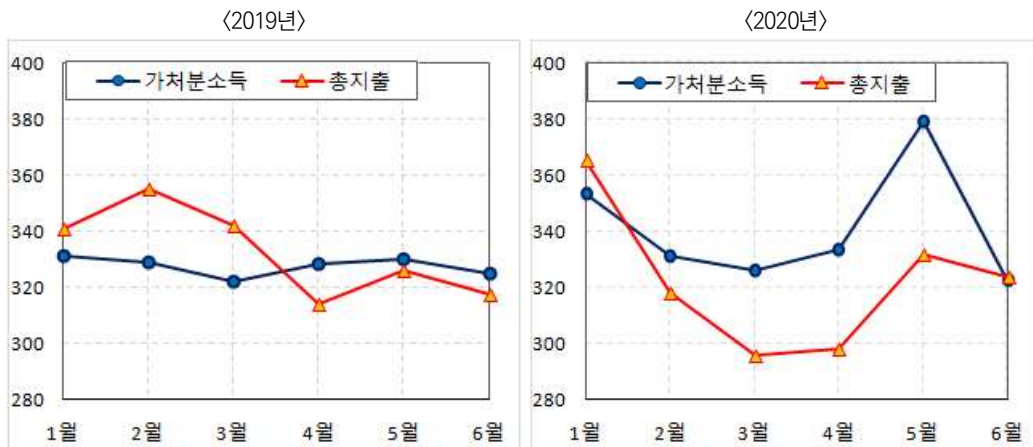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고, 이후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까지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다가, 5월에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 오른쪽 그림 참조). 한편, 가구 소비는 4월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5월에 크게 증가하였고, 6월에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5월에 집중되었고, 소비는 6월 까지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2019년과 2020년 가처분소득과 총지출 월별 변화 추이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월별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달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1월과 2월을 코로나가 확산하기 이전의 시기로 정의한다. 1월과 2월을 평균하는 방식은 2019년과 2020년의 설 명절 차이로 인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1월 혹은 2월의 정보만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명절의 시기 차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기 어렵다.

3월과 4월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시기로, 5월과 6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소비가 늘어난 시기로 정의한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20. 9. 23)에 의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사용된 보조금의 59.7%가 5월에, 31.4%가 6월에 사용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5~6월에 관측된 정부 대책의 효과를 3~4월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4월에도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두 달씩 묶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효과를 약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서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표 1] 연구모형 및 시기 구분

	1시기		2시기		3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모형 1. 코로나19 확산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확산 전		코로나19 확산 후			
모형 2. 코로나19 완화와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재난지원금 미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위의 [표 1]과 같다. 먼저, 2020년 1~2월(1시기)과 3~4월(2시기)의 가구 소득, 지출 차이를 비교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위축 정도를 분석한다(모형1). 비슷하게, 3~4월(2시기)과 5~6월(3시기)의 변화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정, 거리두기 완화 및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모형2).

3) 분석방법

분석 방법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특정 사건(혹은 정책개입)을 경험한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control group)을 설정하고, 두 집단 간에 사건이 발생한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영향을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의 조사대상 가구가 처치집단, 2019년의 조사대상 가구가 비교집단이 된다. 공통 추세(parallel trend) 가정에 의해 2019년의 가구 소득, 지출 변화는 2020년에 감염병이 없었을 경우에 관측되었을 가상적인(counterfactual) 변화로 간주한다. 더 긴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면 집단 간 추세의 변화도 통제할 수 있지만,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가 2019년부터 표본과 조사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 두 해의 자료만 이용한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이중차분법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식 (1)과 같다.

$$\ln Y_i = \alpha + \beta_1 T_i + \beta_2 G_i + \beta_3 D_i + \gamma X_i + \epsilon_i \quad \text{식 (1)}$$

결과변수는 소득과 지출 금액에 로그를 취하여 사용한다. 로그값을 취할 때에는 소득이 0인 사례를 포함하기 위해 모든 가구의 소득에 1만원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은 기존의 소득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표본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소득이 0인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면 표본이 감소하고, 해당 가구에만 특정 소득을 더하면 분포가 달라진다. 가구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측정하며,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한다. 가구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²⁾

T_i 는 시기변수이다. 모형 1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1시기)이면 0, 이후(2시기)이면 1이다. 모형 2에서는 코로나19 완화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이전(2시기)이면 0, 이후(3시기)이면 1이 된다. G_i 은 집단변수이다. 두 모형 모두에서 2019년 가구가 0, 2020년 가구가 1로 정의된다. 코로나나 정책을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는 $D_i = T_i \times G_i$ 이다. β_3 에 대한 추정치가 코로나19 변화 및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X_i 는 통제변수들을 의미하며, 가구주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규모(가구원 수) 변수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분석 결과와 하위 집단별, 소득과 지출의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가구의 소득

2) 소비지출은 식품·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로 구분하고,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이전, 비영리단체이전으로 구분한다.

분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분위는 가구 규모로 균등화한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추가 분석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과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친 영향이 소득계층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4. 기초 통계량: 월별 소득, 지출 변화 추이

다음의 [표 2]는 2019~2020년의 상반기 가구 소득과 지출의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20년 1시기(1~2월) 가구 소득은 2019년에 비해 11.4만 원 가량 증가하였다. 감염병의 확산이 미친 영향은 적었으므로, 물가나 임금 변화 등을 포함하는 연도 효과를 의미한다. 지출의 경우에는 반대로 2019년보다 2020년에 6.5만원이 감소하였다. 2020년 2월 하순의 코로나19 확산이 2020년 1시기의 평균 가구 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시기(3~4월)의 가구 소득과 지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1시기와 비교하면, 소득이 34.9만 원, 지출이 44.3만 원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향과 계절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계절적 요인만 있었던 2019년에도 2시기 소득과 지출이 1시기에 비해 적었지만(소득 21.3만 원, 지출 19.8만 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에는 소득과 지출 모두에서 감소 폭이 더 컸다.

[표 2] 2019~2020년 상반기 가구 소득과 지출

(단위: 만원/월)

		1시기(1-2월)	2시기(3-4월)	3시기(5-6월)
가구 소득	2019년	426.8	405.5	413.0
	2020년	438.2	403.3	433.5
가구 지출	2019년	348.1	328.3	321.8
	2020년	341.6	297.3	3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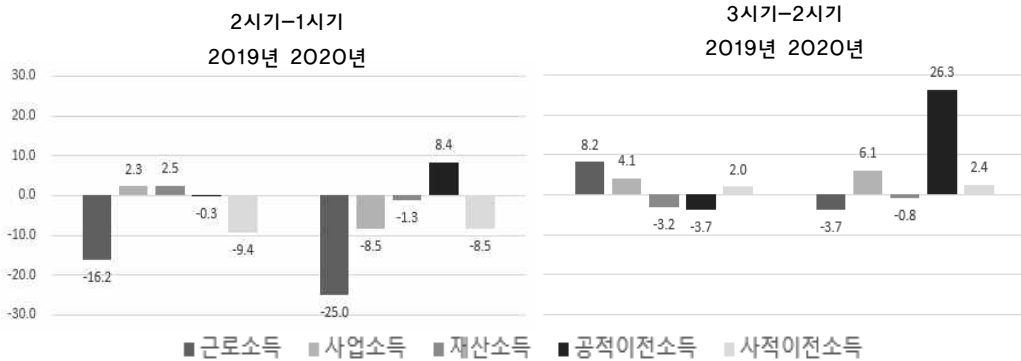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20년 3시기(5~6월)의 가구 소득은 2시기의 소득보다 30.2만원 증가하여 1시기의 소득에 근접하였다. 가구 지출 역시 2시기에 비해 30.5만 원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소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2019년 같은 시기에도 가구 소득이 7.5만원 증가했지만, 2020년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다. 지출의 경우, 2019년 같은 시기에는 6.5만원 감소했지만 2020년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2020년 3시기의 소득, 지출 변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5] 연도별, 시기별 소득항목 변화

(단위: 만원/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는 각 시기의 가구 소득 세부항목 변화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2시기의 가구 소득 감소는 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2019년에도 1시기에 비해 2시기의 근로소득이 감소했지만, 2020년의 감소 정도가 훨씬 컸다. 사업소득은 2019년 2시기에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4월부터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일부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확인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체적인 가구 소득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반면, 2020년 3시기의 가구 소득 증가는 대부분 공적이전소득이 높아진 결과였다. 3시기의 공적이전소득은 2시기에 비해 가구당 평균 26.3만원 증가하였다.³⁾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을 반영한다. 근로소득은 1~2시기 변화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줄었지만 3시기에도 감소 추이가 이어졌다. 사업소득은 증가 추이로 반등하긴 했지만, 2019년의 같은 시기 변화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6]는 2019년과 2020년의 시기별 가구 지출 세부항목 변화를 보여준다.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 2시기의 소비지출 감소는 주로 보건, 음식·숙박, 오락·문화, 기타 상품·서비스, 교육 등의 항목에서 두드러졌다. 대체로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외식의 대체 소비로 가정 내 식사가 늘면서 식품·음료의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변화가 관측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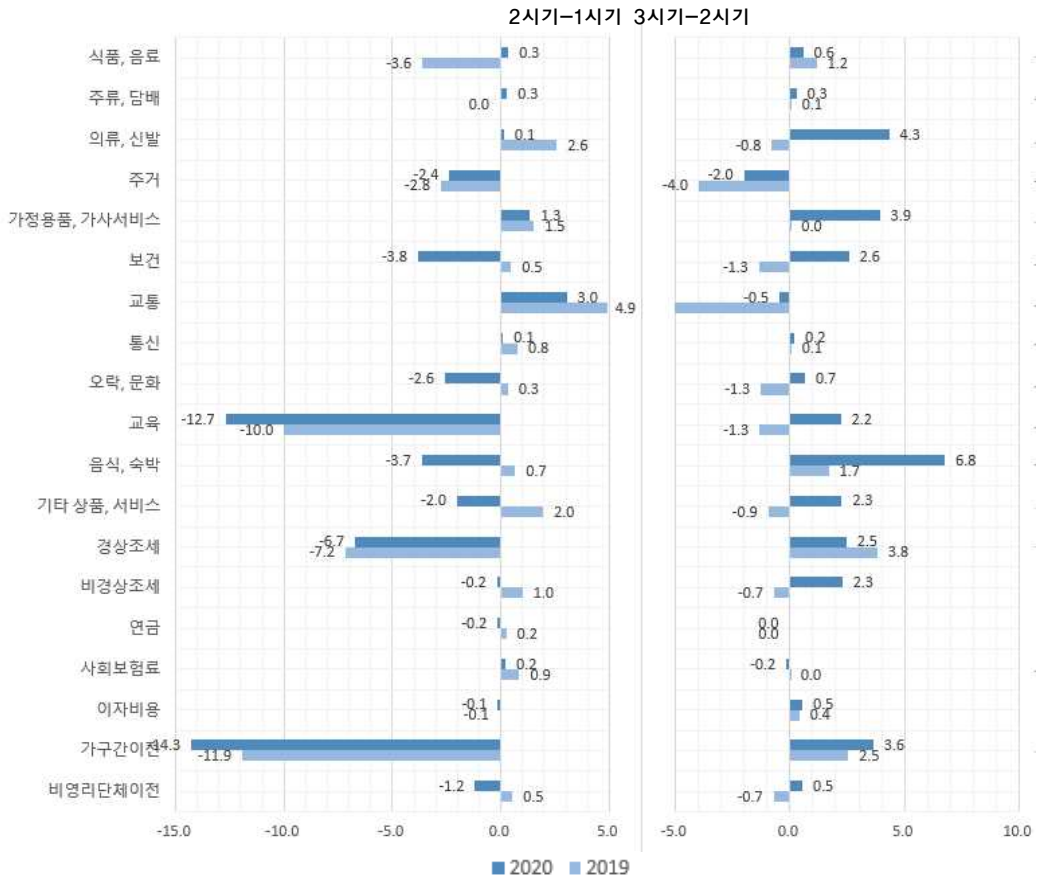
3)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40(1인 가구)~100만원(4인 가구 이상)을 지급하였고, 평균은 대략 60~80만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5~6월의 가구 소득을 평균하여 변화 정도를 보여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 비소비지출 항목에서는 이전지출과 관련된 항목에서 감소 추이가 나타났다.

반면, 3시기의 가구 지출 회복은 음식·숙박,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기타 상품·서비스 등의 항목에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는 2시기에 소비지출이 감소한 항목을 중심으로 3시기 가구 지출이 반등했지만, 항목의 범위나 지출 변화 정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림 6] 연도별, 시기별 지출항목 변화

(단위: 만원/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5. 추정 결과

1) 평균 효과

[표 3]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모형1과 모형2의 이중차분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추정식 (1)에서 β_3 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모형 1)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정책의 효과(모형 2)를 가리킨다.

모형1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가구 소득에서 -0.44, 가구 지출에서 -0.81이었고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감염병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로 인해 1시기에 비해 2시기의 가구 소득은 4.4%, 가구 지출은 8.1%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1시기에 해당하는 2월 말에 가구 지출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시기에 해당하는 4월에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형1의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효과를 과소추정할 우려가 있다. 모형1의 결과는 감염병 확산이 가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의 변화 정도가 더 컸음을 보여준다.

[표 3] 2019-2020년 상반기 소득, 지출 변화

	모형1				모형2			
	소득		지출		소득		지출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코로나19 효과	-0.44	(.022)*	-0.81	(.012)***				
거리두기 완화 및 재난지원금 효과					.111	(.020)***	.124	(.012)***
시기(T)	-.028	(.015)	-.065	(.009)***	.051	(.014)***	-.009	(.008)
집단(G)	.036	(.015)*	-.023	(.009)**	-.009	(.014)	-.105	(.008)***
여성	-.176	(.013)***	-.135	(.007)***	-.167	(.012)***	-.124	(.007)***
연령	.046	(.002)***	.057	(.001)***	.054	(.002)***	.060	(.001)***
연령제곱	-.0005	(.000)***	-.0006	(.000)***	-.0005	(.000)***	-.001	(.000)***
고등학교	.247	(.017)***	.257	(.010)***	.219	(.016)***	.252	(.009)***
대학 이상	.524	(.018)***	.510	(.010)***	.478	(.017)***	.500	(.010)***
가구규모	.325	(.005)***	.238	(.003)***	.312	(.005)***	.237	(.003)***
상수	3.578	(.005)***	3.502	(.033)***	3.386	(.054)***	3.355	(.032)***
F-값	1424.24		3478.61		1521.75		3676.48	
조정 R ²	.268		.472		.279		.483	
표본수	34,955				35,455			

주: ***: p<.001, **: p<.01. *: p<.0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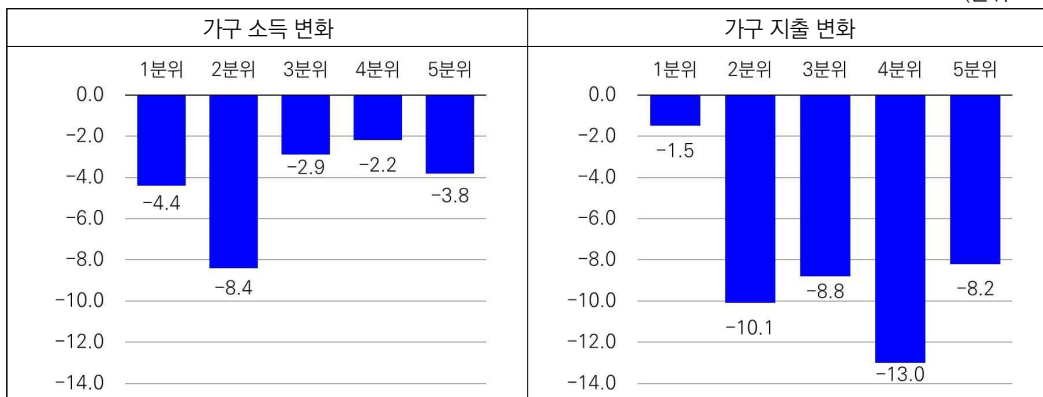
모형2의 이중차분 결과는 코로나19 완화 및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가구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β_3 의 추정치는 가구 소득이 0.111, 가구 지출이 0.124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가구 소득이 11.1%, 가구 지출이 12.4%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4월부터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형2의 결과 역시 소득과 지출의 증가 정도를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2시기에 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던 것과 다르게, 3시기에는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2) 소득 분위별 효과

다음의 [그림 7]은 모형1의 이중차분 분석을 소득분위별로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가구 소득과 지출 감소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측되었지만, 변화 정도는 집단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다. 1분위 저소득 가구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의 감소 정도가 작았다. 주거비, 식비, 공교육과 같은 필수재 중심의 지출을 더 줄이기가 어려운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한다.⁴⁾ 2분위 가구에서는 가구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는데,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이 속해 있어서 고용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3~5분위 가구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의 감소율이 훨씬 높았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는 노동시장 충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구에 비해 가구 지출의 감소율이 높은 것은 비필수재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림 7]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구 소득, 지출 변화(모형 1)

(단위 : %)



주: 추정식 (1)의 β_3 추정치에 100을 곱한 수치임. [표 3]과 동일한 변수들을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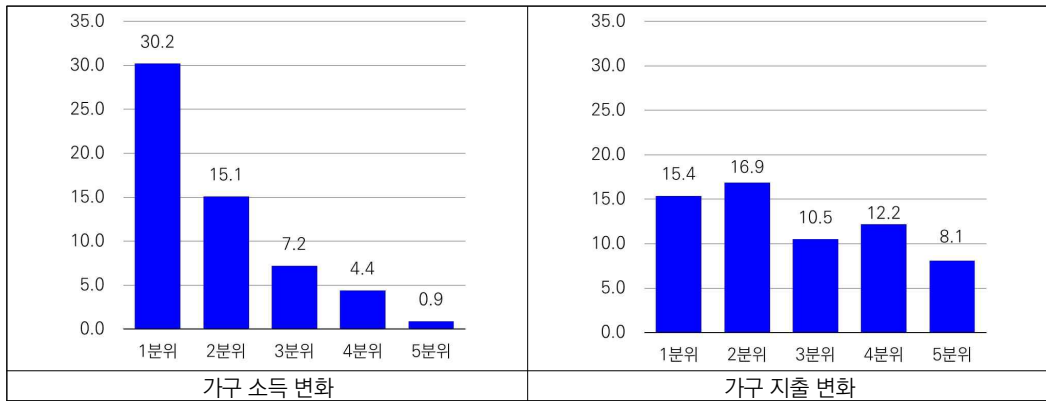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4) 주거비, 식비, 공교육비를 필수재로 분류하고, 통신비와 보건의료비는 준필수재로 분류한다 (손연정 외, 2019)

다음의 [그림 8]은 모형2의 이중차분 분석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분위 집단에서 전체 가구에서의 변화와 동일하게 소득과 지출 수준이 반등하였다. 가구 소득 변화에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0.2% 증가한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는 0.9%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 규모만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에 기인한다. 소득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는 비슷했지만,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완화 및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소득, 지출 변화(모형 2)

(단위 : %)



주: 추정식 (1)의 β_3 추정치에 100을 곱한 수치임. [표 3]과 동일한 변수들을 포함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 지출에서도 대체로 저소득 가구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분위 가구의 지출이 16.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5분위 가구의 지출은 8.1% 증가에 그쳤다. 단, 가구 지출 변화와 한계소비성향의 개념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위 그림의 가구 지출 결과는 2시기 지출 규모 대비 2~3시기 지출 변화의 비중($=\Delta C_t / C_{t-1}$)을 보여준다. 후술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부 대책의 한계소비성향은 2~3시기 소득 변화 대비 2~3시기 지출 변화 비중($=\Delta C_t / \Delta Y_t$)을 의미한다.

집단별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소비지출의 회복 양상이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5분위 가구에서는 소득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지출이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지출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던 1분위 가구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출 증가가 관측되었는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3개월로 제한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이 완화되고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변화는 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지출보다 소득의 변화가 더 컸지만, 고소득 가구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 변화가 더 크게 관측되었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 비해 고소득 가구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의 분석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변화가 시기별로 소득분위에 따라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분위별 차이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과 지출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모형1과 모형2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구 소득의 항목별 이중차분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정리하였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시기에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변화는 주로 근로소득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1분위 가구에서는 근로소득 감소율이 평균 37.2%였고, 2분위에서는 그보다 높은 45.8% 수준이었다. 반면,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모든 소득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소득 감소 추이를 상쇄하기에는 급여수준이 충분하지 않았다.

3시기의 가구 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큰 비중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고용충격이 일부 회복되면서 2분위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시기 근로·사업소득의 증가율은 직전 시기의 노동소득 감소를 만회하기에는 적은 편이었다. 또한, 4분위와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의 감소 추이가 오히려 더 커지는 변화가 관측되었다.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매출 감소가 제조업 등의 주변 산업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세부 소득항목 변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모형1〉					
근로소득	-37.2	-45.8	1.3	-2.6	-5.1
사업소득	-2.3	6.4	-23.7	-14.7	-17.7
재산소득	-6.6	1.0	-5.8	0.1	3.4
공적이전소득	17.4	30.2	25.4	52.3	33.3
사적이전소득	-9.1	10.3	11.0	9.4	-5.0
〈모형2〉					
근로소득	-2.9	16.2	1.0	-15.6	-6.7
사업소득	2.0	-13.8	2.9	10.8	5.3
재산소득	0.7	3.0	7.1	6.7	-1.8
공적이전소득	51.0	101.0	107.2	105.0	130.0
사적이전소득	-7.0	-6.2	6.5	4.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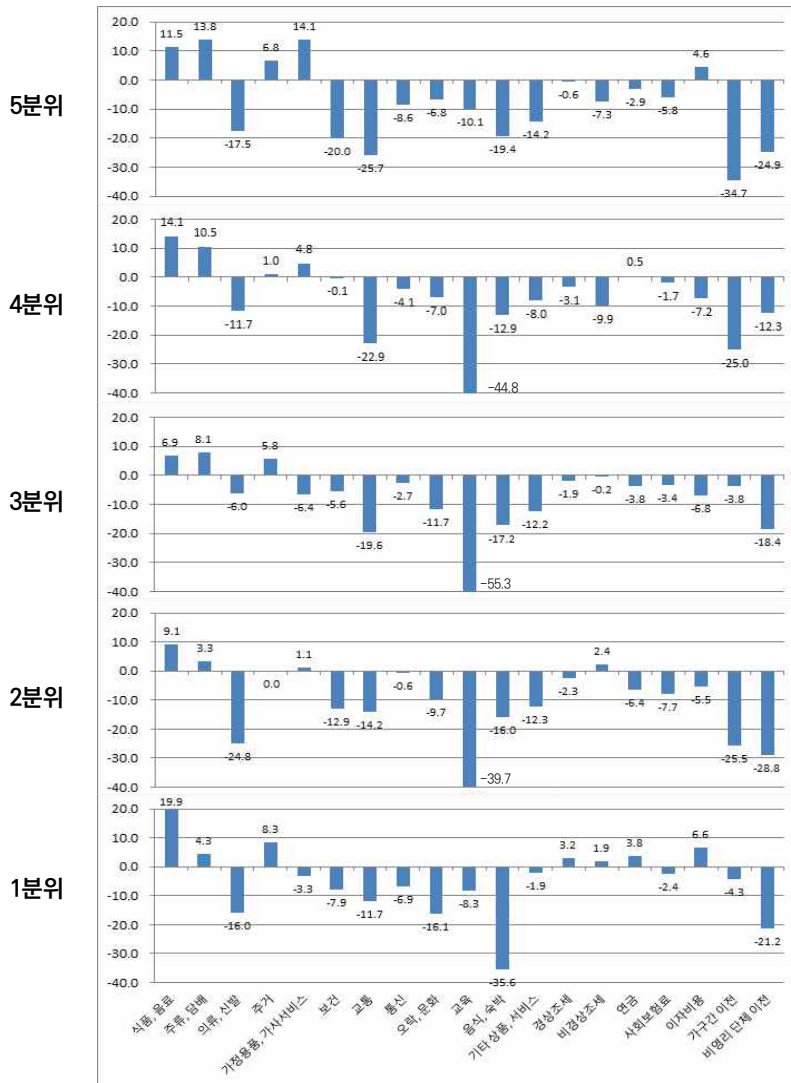
주: 추정식 (1)의 β_3 추정치에 100을 곱한 수치임. [표 3]과 동일한 변수들을 포함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의 [그림 9]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소득분위별로 각 지출항목의 변화를 보여준다. 감염병의 확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적인 변화 추이는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소비지출에서는 외부활동과 관련이 높은 교육, 의류·신발, 음식·숙박, 교통 항목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고, 비소비지출에서는 가구간이전,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림 9] 소득분위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출항목 변화(모형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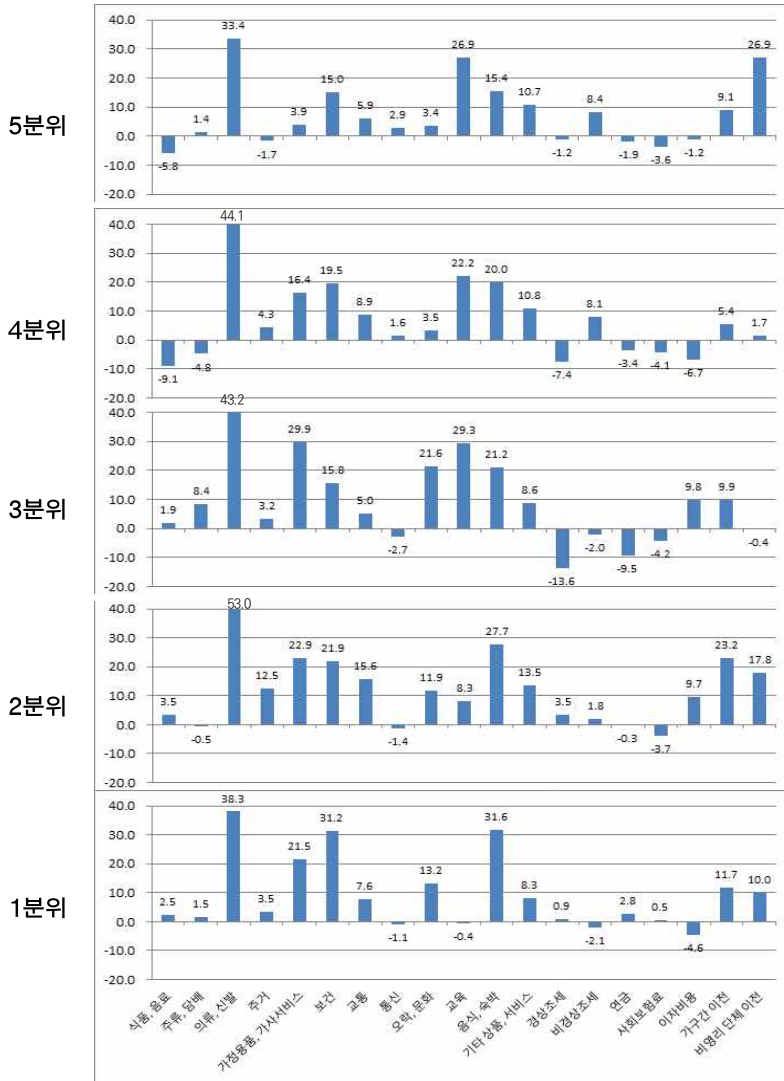


주: 추정식 (1)의 β_3 추정치에 100을 곱한 수치임. [표 3]과 동일한 변수들을 포함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분위 가구에서는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출 변화가 적은 편이었지만, 개별 항목별 변화를 추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일부 항목에서는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점도 관측되었다. 교육비의 경우, 노인 가구 비중이 높은 1분위에서는 감소율이 적었고, 2~4분

[그림 10] 소득분위별 코로나19 완화와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지출항목 변화(모형2)

(단위: %)



주: 추정식 (1)의 β_3 추정치에 100을 곱한 수치임. [표 3]과 동일한 변수들을 포함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위 가구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다. 5분위의 고소득 가구에서도 교육비 감소가 나타났지만 감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외식이나 여행과 관련된 음식·숙박비 지출에서는 1분위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⁵⁾ 5분위 가구에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다.

위의 [그림 10]은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시기의 지출항목별 변화를 소득분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앞의 [그림 9]와 반대로 모든 소득분위에서 대부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의류·신발, 음식·숙박, 교육,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등 다수의 항목에서 지출 증가가 관측되었다. 대체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 지출이 많이 감소했던 항목들에 해당한다. 3시기에 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크게 관측된 1분위 가구에서도 다른 소득분위와 비슷한 방향으로 지출이 증가하였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에는 3~5분위 가구에 비해, 2분위 가구에서는 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1분위 가구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소비 효과 : 한계소비성향

여기서는 2020년 5~6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초기 대응이 가구 소비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계소비성향, 즉 소득 1단위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킨 정도를 계산한다. 3~4월과 비교하여 5~6월에 기초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은 +1.6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표 5] 참조). 이 시기에 공적이전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26.3만원 증가하였다. 그 결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은 30.3만원 증가하였다. 3~4월과 비교하여 5~6월에 소비지출은 21.3만원 증가하였고, 비소비지출은 9.3만원 증가하였다. 이 둘을 합한 총지출은 30.6만원 증가하였다.

두 달 사이에 소비지출 증가액은 21.3만원이므로, 경상소득 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계소비성향은 $0.704(=21.3/30.3)$ 이고, 공적이전소득 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계소비성향은 $0.810(=21.3/26.3)$ 이다. [표 2]의 평균 소득 및 지출액과 [표 3]의 이증차분 결과를 이용한 한계소비성향 추정도 가능하다.⁶⁾ 2020년 5~6월 평균 소득 및 지출액에 이증차분의 회귀계수를 적용하면, 가구 소득 변화는 $43.3\text{만원}(=433.5 \times (111.1/11.1))$, 가구 지출 변화는 $36.2\text{만원}(=327.8 \times (112.4/12.4))$ 이다. 이 방식으로 추정된 한계소비성향은 $0.836(=36.2/43.3)$ 이며, 기술 통계에 기초한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다.

5) 단, 여기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상대적인 감소율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외식이나 여행 관련 항목의 지출 금액이 다른 분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감소율이 높더라도 절대적인 지출금액의 감소 정도는 적은 편이다.

6)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표 5] 전체 가구의 시기별 소득, 지출 변화

(단위: 만원/월)

2020년	1-2월	3-4월 (1)	5-6월 (2)	차이 (2)-(1)
경상소득	438	403	434	30.3
근로소득	288	262	259	-3.7
사업소득	81	73	79	6.1
재산소득	4	3	2	-0.9
공적이전	39	47	73	26.3
사적이전	26	18	20	2.4
기초시장소득	373	339	340	1.6
총지출	342	297	328	30.6
소비지출	246	224	245	21.3
비소비지출	96	73	83	9.3
이자비용	9	8	9	0.5
소득-지출	97	106	106	-0.3

주: 기초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4월과 비교하여 5~6월에 비소비지출은 9.3만 원 증가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세금이 4.8만 원, 가구간이전이 3.6만 원, 이자가 0.5만 원 증가하였다. 이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지원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아도 2020년에 가계부채는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총액이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하였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참조). 저축액(소득-지출)은 이 기간 동안 3천 원 감소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요약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지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특히 세금과 사적이전 지출)에 사용하였다. 저축을 늘리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소득 분위별로 공적이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한다. [표 6]에는 2시기와 3시기 사이의 가구 소득과 지출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정리하였다. 1분위 가구에서 두 달 사이에 공적이전소득은 25.0만 원 증가하였고, 총소비지출은 11.6만 원 증가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분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465이다. 1분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46.5%를 소비지출에 사용하였다고 해석한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각각 0.871, 0.505, 1.404, 0.940이다. 소득이 높은 4분위와 5분위에서는 증가한 공적이전소득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

[표 6] 2020년 2시기와 3시기 사이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지출 변화와 3시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단위: 만원/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상소득 증가		30.5	53.0	36.4	28.4	4.4
공적이전 증가	(1)	25.0	37.1	26.2	20.9	21.8
총소비지출 증가	(2)	11.6	32.3	13.2	29.4	20.5
소비증가 /공적이전증가	(2)/(1)	0.465	0.871	0.505	1.404	0.940
총소득	(3)	256	556	780	1,056	1,693
공적이전소득	(4)	104	88	62	59	52
공적이전소득 비중(%)	(4)/(3)	40.7	15.9	8.0	5.6	3.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고소득 가구에서 2~3시기 소비지출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첫째, 소비 평탄화 성향이 작용한 결과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시기에 고소득 분위 가구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의 감소율이 저소득 분위 가구보다 훨씬 높았다(그림 7 참조). 직전 시점에 고소득 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를 더 많이 줄였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것을 소비 감소의 회복에 적극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시기의 소비지출 감소와 3시기의 보조금 지급이 같이 작용한 결과이다. 고소득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필수재 소비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비해 소비 지출을 조정하기가 용이하다.

둘째, 일시적인 보조금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득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3시기에 공적이전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에서 40.7%로 매우 높았고, 2분위 15.9%, 3분위 8.0%, 4분위 5.6%, 5분위 3.1%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줄어든다. (표 6 참조).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 보조금은 시장소득에 준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는 정부 보조금을 더 신중하게 사용할 유인이 있다. 실제로 저소득 가구는 소비 지출 외에 저축이나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반면, 고소득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행동경제학 연구들에 의하면, 소득 증가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소비지출을 최적화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해당 소득을 단순히 소비할 수 있다(Caballero, 1995; Parker, 1999; Matejka and Sims, 2010; Reis, 2006). 또한, 심리적 계좌(mental accounting)이론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들은 보조금 지급을 기존의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일종의 보너스처럼 생각하고, 상당 부분을 소비지출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Baugh, Ben-David, Park & Parker, 2021).

6.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다른 영향 요인의 변화를 통제된 조건에서 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완화 과정 및 정부와 사회의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 상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가구 소득, 지출 변화를 2019년 같은 시기의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가구 소득을 4.4%, 지출을 8.1% 감소시켰다. 감염병의 확산은 소득보다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가구 소득이 11.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가구 소득과 지출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가구 소득의 감소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측되었지만, 저소득 가구는 근로소득이, 고소득 가구는 사업소득이 더 많이 감소하는 차이가 있었다. 1분위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소득 감소보다 지출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는 소득 변화 없이도 가구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은 1분위 가구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 감소율이 작았다. 감염병 위기 하에서 저소득 가구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 소득과 지출이 증가하였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보편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보조금의 지급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 지출 감소가 적었던 1분위 가구에서도 다른 분위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구 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1분위 이상 가구에서는 소득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감소 보전과 소비 활성화의 두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지출에 나머지는 비소비지출(세금, 사적이전 지출)에 사용되었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현금 지원금은 용도나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 2020년 상반기에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용도와 사용기간을 한정하였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용도와 기간 한정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지만, 또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소비지출 형태를 자료로 보면, 용도와 기간 한정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사용기간을 한정하여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저축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소비지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2020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과 정부 대응이 가구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감염병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였다. 정부 대응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보였다. 월 단위 가구 소득, 지출 변화에 기초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설계 시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한 영향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영향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할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주로 연 단위로 생산되는 패널자료들은 급격한 단기적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어렵다. 일부 자료에서 월 단위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일 가구를 추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연 단위 패널자료의 조사 주기를 줄이거나, 월별 조사의 패널자료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미루, 오윤해(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281, 1-8.
- 김유선(2020), 코로나 위기와 6월 고용동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3, 1-23.
- 남재현, 이래혁(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63-95.
- 오삼일, 이상아(2020),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BOK 이슈노트. 2020-9, 1-12.
-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2021),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원진, 여유진(2021), 코로나19 확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가구 소득 및 지출의 변화: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현주, 강신욱, 김현경, 이병희, 주상영, 전지현(2016),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Pagel, M., & Yannelis, C. (2020), How Does Household Spending Respond to an Epidemic? Consump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26949.
- Baugh, B., I. Ben-David, H. Park, and J. Parker (2021). "Asymmetric Consumption Smooth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11(1), 192-230.
- BEA(2020),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eptember 2020.
- Bounie, D., Camara, Y. & Galbraith, J.(2020), Consumers' Mobility, Expenditure and Online-Offline Substitution Response to COVID-19: Evidence from French Transaction Data, CIRANO Working Papers. 2020s-28, 1-53.
- Caballero, R. J. (1995). "Near-Rationality, Heterogeneity, and Aggregate Consump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7(1), 29-48.
- Chen, H., Qian, W., & Wen, Q.(2020),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Consumption: Learning from High Frequency Transaction Data, Available at SSRN 3568574.
- Chetty, R., Friedman, J. N., Nathaniel, H., Michael, S., &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2020), How Did COVID-19 and Stabilization Policies Affect Spending and Employment? A New Real-Time Economic Tracker Based on Private Sector Data, NBER Working Paper, No. 27431.
- ILO (2020),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Sixth edition.
- Kim, S., Koh, K., & Lyou, W. (2020), Spending Impact of COVID-19 Stimulus Payment: Evidence from Card Transaction Data in South Korea, Available at SSRN 3701676.
- Malley, J., & Moutos, T. (1996), Unemployment and Consumption, Oxford Economic Papers. 48(4), 584-600.
- Matejka, Filip, and Christopher A. Sims (2010). "Discrete Actions in Information-Constrained Tracking Problems," Unpublished.

Parker, Jonathan A. (1999). "The Reac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to Predictable Changes in Social Security Taxes," *American Economic Review*. 89(4), 959-73.

Reis, Ricardo (2006). "Inattentive Consumer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3 (8): 1761-80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9. 2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Abstract

The effects of COVID-19 and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o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in Korea

Seungho Lee* · Minki Hong**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VID-19 and 1st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EDRF) on household economy in Korea. We applied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using monthly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Statistical Office. According to the result, the spread of COVID-19 reduced household income by 4.4% and expenditure by 8.1%. The easing of social distancing and government subsidies increased household income by 11.1% and expenditure by 12.4%.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subsequent adjustments to social distancing and the provision of the EDRF recovere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economic shock to households. During the pandemic period, the decrease in income was greatest in the 2nd quintile households, and the decrease in expenditure was observed to be greater in the high-income households. When the COVID-19 was stabilized and the EDRF was provided, the income growth rate for low-income households was higher, and expenditure increased evenly across all income quintiles. About 70-80% of the income increased by the provision of EDRF was used for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rest was used for non-consumption expenditure, not for savings or debt-payment. We conclu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initial response to the spread of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aspects of income reduction and consumption slowdown.

Keywords: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household income, household expenditur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2021. 7. 15. 접수 / 2021. 8. 17. 1차수정 / 2021. 9. 6. 게재확정

* The First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leesh99@kli.re.kr)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hminki@kli.re.kr)